

특별인터뷰 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교육격차 줄이고 고등교육 경쟁력 높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함께 가는 학습복지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교육력 강화로 공교육 신뢰 제고,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 HRD·평생직업교육체제 확립,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교육·HRD의 국제적 역할 강화 등 5개 전략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 정책면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참여정부는 학교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 완전 실시(2004), 중등학교 취학률 97.2% 달성(2005)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요.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에서 분제해결력 1위, 읽기영역 2위 등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고등교육의 양적성장에도 발맞춰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HRD)·평생학습체제를 확립,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그간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의 다섯 가지 전략목표는 무엇이며, 이번 업무계획 수립에서 여년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먼저 학교 교육력 강화에 초점을 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고, 두 번째로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HRD 및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확충해 국가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네 번째는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5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25개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 아래 103개의 단위과제와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또 25개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수준은 OECD의 PISA리포트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마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설정, 무인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생애출발점부터 교육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것이며,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활용해 학생건강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내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6 곳을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등 교원양성·임용제의 혁신도 꾀할 것입니다. 또 영어교사들의 집중심화연수를 통해 학교 영어교육을 실용생활영어 중심으로 변화시켜가고, 2008 새 대입제도 첫 시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BS의 수능강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

정입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학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개혁 및 특성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객관화된 대학특성화지표를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을 지원, 자발적 노력과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의학·치의학·한의학·경영·물류 전문대학원 등을 통한 국제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 국립대학이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울산국립대학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5개 내외의 대학 법인화를 추진,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더불어 평생학습 체제 구축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평생에 걸쳐 육성하고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 관리에 집중해 노동부, 정통부 등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인 누리사업의 지난 3년간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리사업의 성과 확산 및 정착을 위한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계획합니다.

이밖에 시군구 평생학습도시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여성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직업세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제개편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학교와 노동시장, 학교와 학교간 이동 학습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적지원 확대, 평생학습 시대에 맞춰 직업교육체제 개편,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대 등 교육제도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교육격차 완화 사업은 사회적 형평성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교육격차 해소 원년'의 기초를 유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2003), 방과후 학교(2005), 정부보충 학자금대출사업(2006) 등 다양한 교육안정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릴 때의 학습격차가 자라면서 더욱 커진다고 보고 생애초기부터 학습능력 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에 맞는 정책을
구현해 갈 것입니다.”

e러닝 분야에서 유네스코 교육정보화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우리의 교육제도를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국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 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가실 계획입니까?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제기구 참여와 교류 확대로 교육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해외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해 한국의 교육정책과 노하우 등을 저개발국에 적극 전수할 계획입니다. 또 한·중·일 교류 확대와 국제홍보를 강화해 역사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추진과제들이 올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바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출발점부터 교육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교원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구현해 갈 것입니다. 교육마당21 독자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정리 | 이종철 기자 rollin70@naver.com

교육현장에서는...

“안전한 학교, 알찬 학습... 학습복지사회 기대”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학원에 가거나 조기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일찍 취업하면서 학위도 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농산어촌이나 도시에서 똑같이 우수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삶의 근거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이다. 50세 이상 노인들도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동화를 들려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교육은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다. 교육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교는 물론 일터, 지역 사회,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 함께 가는 학습복지사회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애기본학습능력 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교육 측면에서 극복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 5개 정책 목표 아래 25개 성과목표마다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제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올해 새로운 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를 한결같이 희망하고 있다.

실업계고 진학·취업 보장, 직업교육 ‘파란불’

2007년 업무계획 중에서 실업계고 특성화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뚜렷한 소신과 목표 없이 ‘너도나도 대학을 가는’ 풍토로 고학력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 특성화’ 정책은 실업계고 졸업 후 입직했다가 공부가 더 필요하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학위과정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특성화고는 198개교로 대

폭 확대된다.

이미 경기기계공고, 논산공고, 함덕신입고는 신성대학, 현대제철과 협약을 맺어 학교 졸업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보장하는 '맞춤형 진로 예약제'를 운영 중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은 3,500만원 연봉을 받는 신입사원으로 채용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신성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도 있지요,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경기기계공고 조용 교감의 말이다. 그는 산업별 소관 정부부처에 위탁하는 특성화고 육성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반기며 "실업제고 특성화방안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 시민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학벌주의에 따른 직업교육 기피 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감은 "조리, 애니메이션 등 특성화고 지원이 인기학과에 치중되지 않고 기계, 전자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들은 기존 대량 생산체제의 기능을 키우는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새 시대 인력양성에 맞는 교수법을 연구해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원평가제, 공교육 강화에 "긍정적"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학부모와 많은 교사들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면 이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면서 큰 기대를 나타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임권복 용인 부성고 교사)

"교사가 평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공교육 내실화에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선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비싼 돈을 들여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돼 사교육비도 줄어줄 것 같습니다."(고1 자녀를 둔 이봉화씨,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학부모들은 이번에 강조된 학교 안전망 강화 정책에도 기대를 걸었다.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BK21사업과 전문대학원 체제가 정착돼 고등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학부모와 많은 교사들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면
이 제도가 안착돼야 한다면서
큰 기대를 나타냈다.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학생을 먼저 보상·
치료한 후 가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
생하면 피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안타까웠다는 이봉화씨는 “그럴 경우 전학 간
피해 학생은 새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또 전학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번
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교
육을 받도록 한 것은 정말 좋은 대책”이라고 반색
했다.

BK21 논문 질적 향상, 철저한 관리 주문

대학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BK21, 누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
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올해 2단계 BK21사업에는 74개 대학 569개 사
업단이 참여해 석·박사 대학원생 2만 1,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이용박 광주과학기술원 정보기술사업단장은
“BK21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 논문이 양적

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며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이 잘 이뤄지면서 지역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시너지 효
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에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해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
운영 방침이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일정 부분은 대
학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군 1우수고 확대 ‘반가운 소식’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군에 1군 1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에도 기대를 거는 분
위이다.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까지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순갑 충북 단양고 교장은 “1군 1우수고 확대는
농산어촌에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지난
해 우수고로 지정된 단양고는 교육환경을 획기적으
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 교장은 1군 1우수고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
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
상한다며 “이 방안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시골 학교
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장은 “우수고는 3년 동안 지원받기 때문에
그 후가 문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우수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
없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고 평생 동
안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만큼 2007년도 교육인
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에 거는 기대 또한 컸다. ㉔

글 | 신아령 기자 sar@hanmail.net